

“황제 나폴레옹... 그도 결국 사람이었다”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리들리 스콧 감독 '나폴레옹'



영화 나폴레옹.

소니 픽처스 제공

독이 4시간30분짜리 감독판을 따로 만드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사건의 연대기적 열거와 불명확함 속에서 감독은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관계 진전을 두드러지게 다루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을 빠트린 듯한 공백감에 객석에 미치는 감명이 필자에게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스펙터클한 전쟁 신은 이 영화의 백미이다. 전쟁 신에 동원된 수많은 엑스트라들, 100여 마리의 말 등등 2억 달러의 제작비를 들인 영화답게 아우스터리츠 전투(1805)는 여느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 대포로 깨부순 얼음 속으로의 침몰 신은 관람 후까지 눈앞에 어른거렸다.

전쟁술, 리더십, 정복자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그의 어록은 모르는 이가 없다. 나폴레옹을 다룬 출판물은 8만여 권에 이른다. 그에 관한 관심이 세기를 넘나들며 꾸준히 지속되어서이다.

유럽 여러 나라의 국립 갤러리에서 만나본 작품 속 나폴레옹은 픽이나 영웅이었다. 그는 당시의 시각매체인 그림을 통해 본인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PR방식을 알았던 것이다. 또한 엄청난 독서량을 바탕으로 작가 지망생이었던 이력은 병사들을 설득하는 표현력의 귀재였고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영화 '나폴레옹'은 기존의 작품들과 전혀 다른 각도로 인물 나폴레옹을 조명했다. 그는 아내 조세핀의 불륜 소식에 전장을 버리고 귀국하는 행동에다 '조세핀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존적 이미지를 끝까지 보여준다. 쿠데타 장면마저도 동생에게 등 떠밀려 이루는 우스꽝스러움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아무리 영웅이라 신격화해도 '나랑 비슷한 사람'일 뿐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 지...

나폴레옹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에는 'France, Army, Josephine'이 쓰여져 있다. 그의 인생의 키워드는 이 세 단어로 압축된다.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1789년 프랑스혁명이 발발했던 당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시민들이 먹을 빵이 없어서 시위를 한다는 얘기를 듣자 “그럼 과자를 먹으면 되지”라고 했다는 일화는 당시의 봉건주의 사회상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프랑스혁명으로 봉건적 전제정권을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를 마련한 프랑스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 선언)을 발표하며 민중들의 정치적 동원으로 제1공화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혁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도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내적으로 왕권을 복원하려는 왕정파 등의 반혁명 세력들로부터의 위협을 막는 내전을 치러야 했고, 대외적으로는 자국으로 혁명이 전파될 것을 두려워한 오스트리아 왕국, 프로이센 왕국의 공격을 받아 전쟁을 치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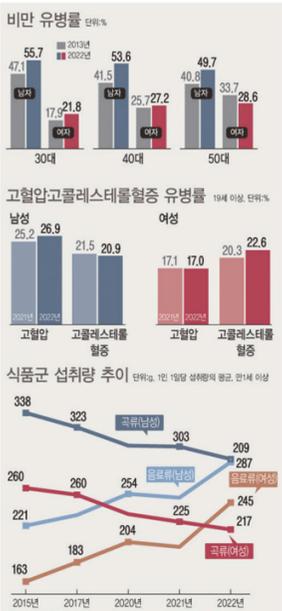
1793년 프랑스.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혁명정부는 독재·공포정치를 통해 안정을 도모한다. 그러나 이듬해인 1794년 로베스피에르는 국민의회에 의해 처형된다. 그 결과, 의회는 1인독재를 막기 위해 5인 총재단 정부를 구성했고 삼권분립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끊임없는 대내·외적 전쟁은 군대의 지위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부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난 나폴레옹이 있었다.

영화 '나폴레옹'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1793년부터 나폴레옹이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죽음을 맞이까지 22년 동안 격변의 프랑스 근대사를 죽 열거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과 신, 시퀀스와 시퀀스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나열은 프랑스혁명사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면 분간이 잘 안 되고, 역사적 배경지식이 있는 경우에도 지루함을 동반하리만큼 분절된 화면이라 영화로부터 얻는 드라마틱한 설득력은 없었다.

시나리오를 쓴 작가 데이비드 스카르파는 이 작품에서 나폴레옹이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으로서 또는 정복자로서 그 면모에 걸맞는 동기 및 욕망, 내면에 대한 통찰력 등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간배경과 경위, 왜 특정조약을 체결했는지, 전투의 당위성 등등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영화 전반에 걸쳐 있는 이 불명확함은 결과만의 나열이라는 인상을 주어, 관심 및 몰입감이 떨어지고 공감을 발효하기가 어려웠다. 스콧 감독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지표



5·18민주묘지의 소나무와 십이지신상, 그리고 청렴

발언대

박제훈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



아침, 저녁 매서운 바람으로 외투를 여미게 되고 나무들도 잎사귀를 떨어뜨리며 추위를 준비하는 초겨울의 계절, 국립·18민주묘지는 여전히 푸르르다. 이유는 묘지 전역을 감싸고 있는 1,000여 그루의 소나무 덕분일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5·18민주묘지와 청렴을 상징하는 나무인 소나무와의 만남이 얼핏 보면 연관성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청렴(淸廉)은 맑을 청(淸), 살필 려

(廉)의 한자어로 “맑은 마음을 살피라”는 뜻으로 쓰이며, 군부독재의 혼탁한 시대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맑고 푸른 가치를 위해 싸웠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결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든다. 5·18민주묘지를 거닐다 보면 또 한가지 독특한 시설이 눈에 띈다. 바로 쥐와 돼지가 없는 10개의 십이지신상이다. 5·18민주유공자들은 고인이 되어 이곳에서 생을 멈추었지만 그날의 승고한 희생과 가치는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 될 거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해진다.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이라는 가치가 예로부터 시작과 끝없이 마음을 경계하고 지켜야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 겨울 5·18민주묘지를 찾아 소나무의 푸르름을 느끼며 맑은 마음을 살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기고 | 강정혁 광산구 구민감사관회장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과 과제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최근 감사원에 광산구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박병규 구청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A팀장에 대한 반복·표적 감사를 했다”며 광산구 권한남용과 부당 징계, 기관 갑질 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육시설 관리, 도시 기반 시설과 복지시설 운영·관리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일들을 도맡는 공단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2014년 설립 이후 꼬리표처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가 중징계를 받던 커녕 2~3개월 후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공단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고도 이행조차 하지 않았다. 조직 운영과 직결된 인사관리의 불공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유를 몰래 빼돌린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도 잇따랐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공단 노조가 앞다투어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광산구는 지난해 8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업무, 예산을 비롯한 운영 전반의 적정성, 타당성을 살피겠다는 취지였다. 인사·조직·계약·노무 분야에서 총 35건의 위반·부당사항이 적발됐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든다는 제1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광산구 곳곳에서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는다는 불만과 민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가 지난 10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활폐기물 미수거 민원이 3213건에 달했다. 올해도 9월까지 발생한 민원이 벌써 2999건 발생해 광산구는 연말이 되면 4000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매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경쟁력도 없고, 내부 문제를 해결할 자정능력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답답한 것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전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되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에 불복하는 등 잡음은 커지고 내부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지고만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향해 “당장 없애라”는 분노 섞인 목소리마저 나온다.

급기야 최근 내부 제보를 통해 특정 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서 공문까지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났다. 이중 핵심으로 지목되는 것이 새로고

침 노동자협의회가 ‘반복·표적 감사’ 피해자로 주장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A팀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받고도 승진한 B 전 본부장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0월 “시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단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사유화한 중대한 부정부패 행위로 규정한다”며 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경찰서 공무원 단속제 의혹 등 A팀장이 연루됐거나 책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와 관련해 언급도 없이 “광산구청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갑질 등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속 조합원’ 이전에 시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일원으로 책임감, 그동안 벌어진 문제와 관련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이나 의견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지난 2월 출범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다.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한다”는 구호도 외쳤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지방공기업에서 상식을 벗어난 ‘비정상’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지역의 비판 여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 11개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사회적 공감대와 상식’을 외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과연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었을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 싶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책임이 가볍지 않은 이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울 수 없다.

박병규 정장은 지난 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남겨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향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거나, 조직원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보호하는 건 노동조합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어느 것이 정의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응답함을 호소했다.

지금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것은 총체적 점검과 반성, 이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개혁이다. 본질을 흐리며 기록권을 지키려는 행위는 경계해야 할 때다.

11개 노조, 지역민 목소리에 응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이 사랑하고 지지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해법, 혁신안을 찾는 데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은 확실한 공산주의자”라는 축사로 제기된 정체성 문제는 차치하고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부디 ‘MZ노조’다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